코로나 위기에도 광주북구의회 의장단 '혈세 펑펑'

확산세 이어지던 2-3월 식비 등 1천300여만원 지출
비상시국 의사일정 단축 무색…집행 목적도 불분명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기초의회 등에서 급여를 반납하거나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북구의회가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비상시국에 의사일정이 단축됐음에도, '간담회' 명분으로 업무추진비를 작년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한 데다 집행목적도 대부분 불투명해 지역민들의 어려운 상황은 외면한 채 개인의 '쌈짓돈'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8천778만원으로, 의장 3천102만원, 부의장 1천386만원, 의회운영·행정자치·경제복지·안전도시위원장 각 99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330만원이다.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시국에 북구의회는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를 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집행목적은 정확한 내용도 명시하지 않은 채 대부분 '의정활동 현안 논의 간담회', '정책간담회'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공개돼 있다.

실제로 '북구의회 1-3월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서'를 살펴보면,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2월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717만1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당초 10일이었던 의사일정을 4일로 단축한 3월에는 629만원을 썼다.

의장은 2-3월 두 달간 578만5천800원, 부의장 100만원, 운영위원장 169만2천원, 행정자치위원장 78만800원, 경제복지위원장 171만1천500원, 안전도시위원장 249만원을 사용했다.

올해 업무추진비 대비 2-3월 지출 비율은 안전도시위원장이 25.15%로 가장 많았고, 의장 18.65%, 경제복지위원장 17.29%, 운영위원장 17.09%, 행정자치위원장 7.89%, 부의장 7.22% 순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안전도시위원장은 62만2천100원을 더 사용했고, 의장 62만800원, 경제복지위원장 49만9천900원, 행정자치위원장도 5만5천300원 늘었다.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은 작년에 비해 줄었다.

특히 의장과 부의장은 지출목적에 '간담회'를 명분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긴 했으나 업무추진비 사용시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오찬과 만찬으로 나눠 기입돼 있는 등 '코로나19 청사출입통제 근무자 격려 간식 구입 내용'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한 내역도 있었다.

반면 운영·행정자치·경제복지 안전도시위원장은 모든 지출내역에 '간담회'로만 적혀 있었고, 코로나19 관련 지출목적으로 기입된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북구의회 관계자는 "'광주시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뒤 담당 직원에게 영수증만 제출할 뿐, 간담회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제출받지 않고 있다"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민혈세로 모인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용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집행내역 대부분이 식사나 선물 구매비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만, 제한적이거나 형식적인 내용이 많다"며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침에 맞게 용도를 명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 목적을 명확히 작성토록 하는 등 보충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색출 본격화

암호화폐 거래자료 확보

경찰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박사방' 유료 회원들을 색출하는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19일에는 암호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베스트 코인'도 압수수색했다.

또 다른 대행업체인 '비트프록시' 측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와 대행업체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74명으로,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16명 포함됐다.

경찰 수사 결과, 조씨는 수위별로 3단계로 나뉜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암호화폐를 받은 뒤 유료 회원을 입장 시켜 성 착취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조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3천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씨의 암호화폐 지갑에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금액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찰은 조씨의 정확한 불법 수익 규모를 확인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조씨가 특정인에 대한 보복 범죄를 의뢰받고 돈만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정황 등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10대 청소년이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붙잡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태평양 원정대'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A(16)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박사방'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해왔으며,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송치했지만 동일한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할 가능성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발견 즉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주세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광주 북구청 민원실 대기실 의자에 띄어 앉기 안내문과 '4월 6일에는 학교가게 해주세요'라는 인형이 놓여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전남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설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범죄인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광주·전남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단장인 박성주 2부장과 수사·지원·국제공조·디지털포렌식·피해자 보호 경찰관 등 46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이명호 1부장이 수사단장을 맡아 총 33명으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을 운영한다. 특별수사단은 6월 말까지 예정된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SNS·다크웹·음란사이트·웹하드)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집중 단속한다.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IT기업 등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SNS를 이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도 끝까지 추적한다.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하고 국세청에 통보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상담·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7건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사건을, 전남지방경찰청은 14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갈, 사기 범죄로 분류되는 '몸캠 피싱' 수사도 광주 8건, 전남 23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척결하겠다는 각오로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 방조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검찰, 동남갑 윤영덕 후보 관계자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이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광주 동남갑 윤영덕 예비후보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최재봉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광주 남구의 모 구의원 자택과 윤 후보 측 관계자의 자택·개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선 경쟁자였던 최영호 예비후보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고발 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2명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 측은 남구청장 재직 시절 실무진이 처리한 봉사 활동 표창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천주교 신자인 자신이 신천지와 유착한 것처럼 꾸며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윤 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후보 측은 이메일을 발송한 IP 주소가 윤 후보 캠프와 가까운 백운광장 주변이고 중국인 명의 선불폰으로 악의적인 문자 메시지들이 발송됐다고 주장했다. /오승지 기자

"내 돈 왜 안 갚아(?)"

펌핵이

○…자신의 돈을 빌려간 지인의 승용차를 돌로 내려친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39)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서구 쌍촌동의 한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B(45)씨와 채무문제로 말다툼하다 근처에 주차돼 있는 B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돌을 이용해 깨뜨린 혐의.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빌려간 돈 200만원을 갚지 않고 계속 미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였다"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아무 죄 없는 차량을 그렇게 훼손시키면 되겠느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최명진 기자